광주 5개 자치구 성과평가 공개 '제각각' 빈축

자체 조례 2002년 남구 시작

2016년 동구까지 제정 완료

홈페이지 등에 '정기 게시' 명시

지자체별 상이…"알권리 외면"

광주 5개 자치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의 결과 공개 실태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치구는 10년 가까이 미공개 상태이고 몇몇은 형식만 겨우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해 왔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성과평가는 지자체가 부서별로 연간 정책·사업 성과를 자체 점검하는 제도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민간 중심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나 포상, 정책 개선 등에 활용된다.

5개 자치구 중에선 2002년 8월 남구를 시작으로 북구(2003년 2월)·광산구(2010년 5월)·서구(2015년 7월)·동구(2016년 3월) 순으로 자체 조례를 제정했다.

그 전에도 자체 평가는 이뤄졌으나, 조례 제정 후로는 일정한 기준이 생겼다는 게 5개 자치구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나 자체 조례와 상위법(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명시된 평가 결과 공개 실태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컸다.

실제 동구는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날 기준 게시된 자료는 2013-2015년 뿐이다.

북구는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평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조례에 의거, 2010년부터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부서별 종합평가 등급만 공개하고 있다.

조례 제정 이후 10년 가까이 결과를 공개해 오지 않았던 서구는 올해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평가 내용을 올렸지만, 북구와 마찬가지로 우수 부서 명단 나열에 그쳤다.

반면 남구는 조례 제정 후 12년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평가서를 게시해 사업 내용과 실적, 문제점과 대책, 평가 의견과 총평까지 공개하고 있다.

광산구도 지난 2023년부터 추진 개요, 실적, 자체 평가, 향후 계획 등 보다 폭넓은 정보가 담긴 성과평가서를 개시하는 중이다.

이처럼 정보 공개 범위가 다른 건 행정의 '의지 차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각 조례나 상위법에 공개 의무만 둘뿐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일선 자치구 관계자는 "외부에서 받는 게 아니라 현주소를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다 보니 소홀한 면이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인수인계도 잘 되지 않았고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성과평가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주민에게 정책 집행 결과를 설명하고 평가받는 과정"이라며 "평가는 하면서 결과를 감추는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처사임은 물론이고 행정 당국이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성학 기자

檢, '처자식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구형

'가족여행' 속여 범행…내달 19일 선고

재판부, 탄원서·홀로 생존 추궁·질타

가족여행을 가장해 떠난 여행지에서 처자식을 살해한 40대에게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 형이 구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지난 22일 열었다.

지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께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으로 차를 몰아 두 아들을 죽게 하고 부인을 숨지게 내버려 둔 혐의를 받는다.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여 이번 범행을 저지른 지씨는 바다에 빠진 후 홀로 창문 밖으로 탈출해 목숨을 부지했다.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지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직원들과 3천만원 상당의 임금 체불 문제를 겪었으며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2억원 정도 빚을 진 상태였다.

그러던 중 10년 가까이 조울증을 앓던 아내가 생을 이어가는 게 힘들다고 토로하자 지씨는 범행을 함께 계획했고 실행했다.

수사 기관 조사 당시 지씨는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순간적인 공포심에 탈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식 재판에서 지씨는 이 같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원서의 제출 경위를 물으며 지씨가 홀로 살아남게 된 경위를 심문했는데,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그를 질타하기도 했다.

증거조사 후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지씨는 "아이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지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착한서구 평화열차' 운행 '착한서구 평화열차'가 지난 22일 탑승객을 태우고 광주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운행한 가운데 열차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평화 통일의 염원을 되새기고 있다. 〈광주서구 제공〉

미성년자 성매매 에이즈 확진자 '징역 7년'

법원 "다수 동종전과 고려"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해 온 에이즈 확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지난 22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그 대가로 현금 5만원이나 담배 등을 줬다.

성매수 피해 청소년들은 A씨로부터 에이즈가 옮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4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순천 레미콘 공장 사망자 3명으로 늘어

순천 한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24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순천시 서면 한 레미콘 공장에서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A(60대)씨가 사고 사흘만인 이날 이른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사고 당일 숨진 2명과 달리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있었던 환자다.

질식 사고 당시 해당 레미콘공장에선 콘크리트 혼화에 쓰이는 화학약품의 저장 탱크 내부 청소 작업이 이뤄졌다.

A씨는 먼저 들어간 이들이 나오지 않자 도우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산소마스크와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순천=정기 기자

'대출금 상환 논란' GGM 노사 갈등 심화

피켓 시위 중 노조원 쓰러져…큰 부상 無

최근 대출금 조기상환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4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덕림동 GGM공장에서 노조와 사측이 충돌해 금속노조 GGM 지회장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조합원들은 GGM 대출금 조기상환 사태에 대해 사측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사측으로부터 항의받았다. 이후 A씨는 대표 면담을 요구했고 이를 제지하던 임직원이 밀쳐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속노조는 같은 날 광주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더 이상의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규탄했다.

GGM 측은 A씨가 쓰러진 데 대해 철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성학 기자